

자료집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 동 주 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국회의원 전병헌 ·  민주정책연구원

주 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초대합니다!

통신산업은 지난 1991년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약5,300만회선을 넘고 있고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이 고착화되고 경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 보호,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의 여부를 놓고 각 업계 및 정부 간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원하며 통신 요금제는 가계의 통신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정책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통신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통신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정

- 주 제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국회의원 전병헌 · 민주정책연구원
- 주 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시 간	내 용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씀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전병헌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민병두 원장(민주정책연구원 원장)
14:10 ~ 14:20	내빈소개 및 취지 설명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4:20 ~ 14:50	발제1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2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14:50 ~ 15:40	종합토론 ■ 좌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토론자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현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U+ 상무)
15:50 ~ 16:00	해산

*세부일정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사 말 씀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인 사 말 씀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병헌(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논란과 함께 단통법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됐고, 통신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시부터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단통법의 시행령은 마치 고무줄령 같습니다. 고무줄 보조금, 고무줄 상한선, 고무줄 추가 보조금, 고무줄 분리요금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시행령에 대한 개선 노력보다는 민간 사업자를 불러 욕박지르는 7~80년대식 관치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치행정은 단통법의 정상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신뢰했던 고객들에 대한 차별과 함께 통신 이용자들에게 기다리면 된다는 심리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부 · 방통위의 관치행정이 도리어 ‘차별금지’라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나눠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은 긴급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모두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은 만큼 통신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진정으로 통신정책이 가야할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나은 통신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에 함께해주신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님,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님을 비롯해 토론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심도 깊고 올바른 통신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와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단통법에 대한 정비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씀

민병두 원장
민주정책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통신정책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기대한다.

국회의원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 민병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통신시장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투명한 유통구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이후 지금까지는 법제정의 취지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온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셈이냐?며 아우성이고, 판매 대리점에서는 매출이 급감하여 존폐위기에 놓일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통법 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국회의원께서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을 통해 통신사화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상이합니다만,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병헌의원님과 함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도 있는 토론회가 단통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하시고 참여해주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 박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님,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님, 이승진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님, 손금주 변호사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님,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님,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장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님,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님, 이상현 SK텔레콤 상무님, 강학주 LGU+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위한 제언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발 제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2014. 10. 28

강 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통신소비자권리 아젠다

- 저렴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공정한 계약조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
-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청구
-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
- **소비자불만**을 듣고 적절히 **대응**

(2014.3.15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 가계통신비 수준
'90년 0.6% → '14년 1/4분기 6.0%
-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지출의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스마트폰 보급과 데이터이용의 증가)
- 통신물가지수의 변화는 이동전화 요금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음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 이동통신사 원가보상을 130%-140% 수준
(2014. 9. 26 아시아통신뉴스 서영교 의원
발표자료 참조)
-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12-105호)
- 2G에서 3G로 넘어가면서 통화요금 인상
- 3G, LTE요금제는 대부분 정액형 요금제로 데이터통신 사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지만 통신이용량 조절을 통해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선택기제 상실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 필요

- 담합된 요금형태-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를 추종, 요금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동안 요금 인가제는 유효경쟁의 틀 안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
-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요금의 공공요금적 의미를 없앴
-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의 통신요금 정책은?

이동통신의 영업정책과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 과점상태 서비스, 가격경쟁보다는 마케팅경쟁 - 가입자 증대를 통한 매출 극대화
-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가 전환비용을 낮게 인식하도록 유도
- 대리점, 판매점은 영업수익 증대를 위해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빈발

이동전화 소비자피해유형

-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44.1%
- ‘통화품질·데이터 상태 불량’ 15.7%
-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
(한국소비자원, 2013)
- 고령소비자 소비자피해 중
 - 정보통신서비스 피해 가장 많음(14.3%)
 - 이동전화 계약과정에 허위과장 심해(알뜰폰 등)

(한국소비자연맹 2014.상반기)

 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

결론 및 제언

1. 통신비 인하
 - 3G와 LTE서비스의 정액요금은 체계적인 인하조정 필요
 - 정액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이 실제 평균사용량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정액요금체계를 재편해야
2. 보조금경쟁에서 품질, 가격 경쟁으로
 -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을 구분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 (단통법에 의해 일부 도입)
 -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유통 체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

결론 및 제언

3. 요금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담합적 요금제, 실제 사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요금제 등에 대한 규제, 종량요금제 확대 등의 방안 필요

4. 요금정보공시제도의 충실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공시

요금제 구성에 있어 여러 요인들을 교차구성
소비자는 비교, 판별이 사실상 불가능

결론 및 제언

5. 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지행위 구체화

- 경쟁저해행위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다를 수 있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필요

6.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에 비추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도 소비자피해 복구를 위해 쓰여질 수 있어야 함

Thank You

한국소비자연맹
www.cuk.or.kr

발 제 2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2014. 10. 28



KICT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곽 정 호** 실장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dustry Institute

CONTENTS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01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02 시행효과 및 현안이슈

03 현안이슈별 찬반논거 비교

04 시사점 및 개선방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01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입법취지



단말기의 경쟁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혼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 확대 및 단말기 가격 경쟁



이동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 통신시장의 혼란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 및 품질 경쟁으로 전환
- 통신사의 요금인하를 위한 투자여력 확보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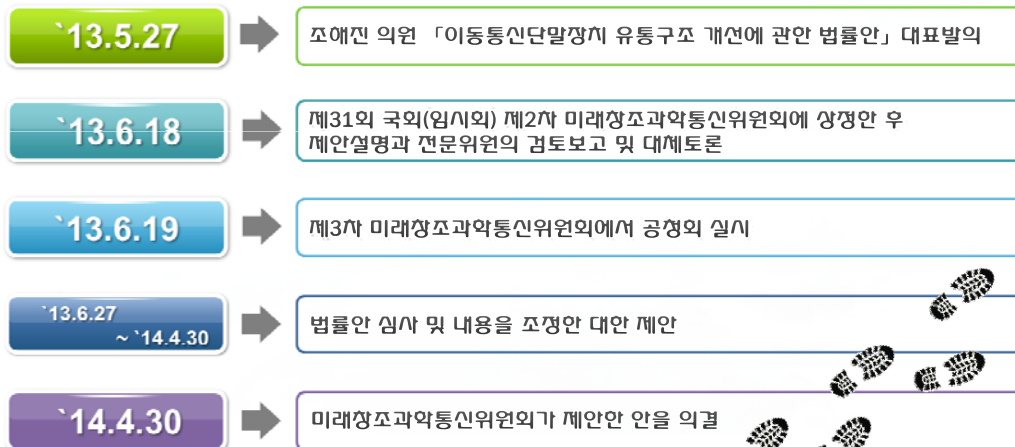
- 정보집권력 및 협상력이 약한 이용자차별 해소
- 이용자 선택권 강화: 이용자 기안 금지, 요금 및 단말기 할인 분리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3

01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입법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4

이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주요내용



1 제4조 :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보조금 상한 및 공시제)

-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
- 이용자가 알기 쉬운방식(이동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 요금제에 따른 공식 지원금 사전 공시
- 매장별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추가 지급규모도 공개 명시)

□ 제43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 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를 지원금 지급 내역과 함께 지원금 지급 내역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외접 또는 판매점 등 제5항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대외접 또는 판매점 등 제5항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2 제6조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예택 제공(비례원칙 준수)

- 통신서비스 단독 가입시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제63조(지원금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예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포함한다(대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자통신사업법」 제62조를 준용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제7조 :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요금제 구분 및 강제 계약 금지)

-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 금지
- 보조금 지급 조건하에 요금제 강행 및 부가서비스 의무 계약 금지

□ 제73조(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총합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시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외접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으로 불합당하거나 표시 광고하여 이용자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외접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금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제 추세중점들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5

이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주요내용



4 제8조 :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판매점 사전승낙제)

-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없이 선임불가
-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 제83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서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결정에 관한 역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에 이 법에 따른 승낙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장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할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9조 : 공정안 유통환경 조성(유통망간 경쟁거제 약립)

- 제조사는 이동사와의 단말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음
- 이동사에 지급하는 잠려금과 관련한 차별적 규정이나 조건 부과 금지

□ 제93조(공정안 유통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8년 대외 합의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장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잠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외접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는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표거래위탁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10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사별번호 조취 시스템 개설)

- 분실도난 단말장치 해의 수출금지
-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KAIT 주권)

□ 제103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명에게 신고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 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기 전에는 제10항 단말장치 분실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추세중점들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6

이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주요내용

7 제11조 : 긴급중지 명령(영업정지 조치 · 발동권)

-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수준, 반호이동상황, 이용자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동 사업자, 대리점, 판매자에게 영업 일시중지명령 가능

□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압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와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2조 : 자료제출 및 보관(장려금 및 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기 관련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점, 송고자, 매수처,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제공한 장려금 규모 및 후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제공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 아니 한다.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쳐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송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쳐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송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면에 공개할 수 없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스마트기생충진절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법령상 조류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7

이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규제체계 비교 >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 (단말기유통법)
· 27만원(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지원금 상한	· 25~35만원 사이 : 방통위 30만원 설정 · 유통망 지원금 15% 포함, 최대 34.5만원
· 없음	지원금 고시	· 상한 내에서 단말기별로 공시
· 27만원 초과 여부 · 고객센터,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 등으로 차별지급, 선택 제한 등	지원금 차변	· 공시된 금액 준수 여부 ·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가능
·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 규제근거 없음	판매권	· 직접조사 및 제재 가능

스마트기생충진절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법령상 조류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8

시행효과

< 단말기유통법 시행효과 비교 >

구분	찬성(효과)	반대(부작용)
법해석	■ 보조금투명화법	■ 보조금금지법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인 보조금 금지로 고객권리 보장 ■ 기만금지: 요금할인과 단말기할인 분리 ■ 정보격차에 의한 이용자차별 해소 ■ 마케팅비 감소로 요금인하 여력 확보 ■ 통신과소비 해소: 저가요금제 및 중고단말기 사용빈도 증가 ※ SKT 보조금 인상, 가입비 폐지, KT 순액요금제, LG전자 출고가 인하(부산일보, 10.23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기능 침해: 가격담합, 고정가격제(시장기능 침해) ■ 가계통신비 체감 인상: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높은 비용부담 ■ 단말기 거래감으로 유통점을 중심으로 소비시장 크게 위축
통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번호이동 감소, 기기변경 및 중고단말 가입자 증가 ■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감소 ■ 요금할인 경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단말기의 보조금 감소 ■ 신규가입률 감소 ■ 단말기 판매량 감소 ■ 판매점, 대리점 폐업 증가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열시장 진정 소비자이득 47.9%, 과잉규제 소비자 손해 26.3%, 잘 모르겠다 25.8%(모노리서치, 2014.9.18) ■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63.6%,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 14.3%, 잘 모름 22.1(모노리서치, 2014.10.15.) ※ 원인조사: 통신사의 낮은 보조금, 제조사의 높은 단말기 가격 ※ 소비자 니즈: 중국산보다 가격에 관계없이 고가핸드폰 선호 	
현안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공시제도 도입: 단말기 유통법 실효성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 요금인가제 개선 ■ 보조금 상한제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구조요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9

현안이슈 (왜 의도한 효과가 충분치 않은가에 대한 해석)

1 분리공시제도(단말기 완전자급제)

- 분리공시란 이동전화사업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의미

▶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도 출고가 인하 및 요금인하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이 분리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이라는 이슈

※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명확히 확인되면 출고가 인하여력으로 확인

※ 분리공시 도입 논란은 장기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

2 요금인가제

-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제도를 의미

▶ 단말기유통법의 입법취지인 통신사 간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슈

※ 시장지배적사업자: 유선전화(KT), 이동전화(SKT)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정책방향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구조요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10

현안이슈 (왜 의도한 효과가 충분치 않은가에 대한 해석)

3 보조금상한제

-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유통점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도화하였으나, 초기 시행결과 보조금 상한제로 인하여 오히려 출고가 및 요금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슈
 - ※ 기준초과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동사·대리점·판매점은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판매가를 공시 의무

4 기타

- 단말기유통법 폐지(과도한 시장개입 및 장기적 후생저하), 신규·기변 단말기보조금 차등허용 등

분리공시제도 도입 이슈

< 분리공시제도 찬반의견 비교 >

- 출고가 인하 기반조성: 제조사 보조금의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
- 소비자의 알권리 및 혼란 방지: 제조사 지원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 수준이 명확하지 않음
- 과도한 보조금 경쟁 지양: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 완화

찬 성



반 대

- 제조사의 영업비밀 자료(판매현황, 출고가와 잠려금 내역 등)
-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 영업비밀 자료를 공개하면 해외마케팅 어려움
- 해외 제조사와의 역차별: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애플, 노키아, 소니 에릭슨, 화웨이, 샤오미 등
- 통신(규제산업)과 제조의 산업특성 상이

03 현안이슈별 찬반 논거 비교
요금인가제 폐지 이슈



< 요금인가제 찬반의견 비교 >

- 통신사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 시장지배적사업자(SMP)의 지정 및 비대칭규제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보장
- 인가제 시행국가 거의 없음
- 인가제로 인한 요금경쟁 제한은 보조금 폐해 발생의 원인



찬 성



반 대

- 약탈적 가격 등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규제(일반적 비대칭규제)
- 핵심은 시장지배력의 보유 유무(OECD 평균점유율 42.1%, SKT 50.6%)
※ KISDI, ETRI 평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시장(경쟁 미흡)
- 요금인하 효과 미비(요금인하 인가 대상 예외),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 주도
- 균형경쟁 확보 이후 폐지

13

03 현안이슈별 찬반 논거 비교
보조금상한제 폐지 이슈



< 보조금상한제 찬반의견 비교 >

- 번호이동/신규 고객의 보조금 혜택 축소(소비자편익 감소)
- 경쟁수단의 부재로 기존 시장 점유율 고착효과



찬 성



반 대

-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기존 구조가 반복될 우려
-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인하 유인 훼손 : 현재 보조금의 절반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상황
- 과도하게 지급된 통신사의 보조금은 고객의 해지비용을 증가시킴



14



-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의 불법지원금, 이용자차별 및 기만,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약관 규제, 지원금 금지 법제화, 이용자 차별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개선 효과 미비**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역 >

구분	보조금 규제 제도	비고
2000.6	■ 이용약관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	-
2003.3	■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금지 법제화	■ 3년 일몰 규제
2006.3	■ 전기통신사업법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 18개월 이상 가입자 보조금 허용
2008.3	■ 보조금 규제 일몰	■ 의무약정제 도입
2010.9	■ 보조금 관련 이용자 차별 규제	■ 인당 27만원 초과 보조금 금지
2014.10	■ 단말기 유통법 시행	■ 보조금 상한 및 공시제 도입

- 2014.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법**으로 초기 시행결과와 부작용도 일부 있으나, 과거와 달리 입법취지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시행초기 법제도의 존재 논란보다는 시장변화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도출된 **협안이슈(분리공시제도, 인가제폐지, 보조금상한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
- 추가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의 바깥쪽 개선은 위해서는 협안이슈 이외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오픈 등 서비스기반 경쟁강화 등)의 병행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우나, 초기 시행결과는 입법취지 달성 및 실효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존재논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 및 소비자후생 증가라는 정책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 좌 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토론자 : 안정상(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삼성전자 상무)
이상헌(SK텔레콤 상무)
강학주(LGU+ 상무)

토 론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토 론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토 론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토 론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토 론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토 론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토 론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토 론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토 론

강학주
LGU+ 상무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